

4대강 살리기에 뺏기는 광주·전남 SOC 예산

20~30% 일률 삭감...U대회·엑스포 타격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SOC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SOC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오는 2012년까지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아도 SOC 인프라가 취약한 광주·전남지역의 접근성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와 지역 SOC=4대강 살리기의 본예산은 모두 16조9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낙동강에 전체 예산의 58%인 9.8조원이 투입된다. 반면 영산강은 전체 예산의 15%인 2조6천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관련 예산 5조3천억원을 합하면 낙동강과 영산강의 재원 차이는 더욱 커진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재원을 SOC 예산에서 대부분 마련하기로 하고 내년도 전체 SOC 예산의 30%에 이르는 6조7천억원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SOC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적게는 20%, 많게는 30% 이상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각 지자체와 내년도 SOC 예산 삭감 협의에 나서고 있다.

◇SOC 예산 협의의 상황=광주시와 전남도에서는 내년도 SOC 예산 삭감 규모 최소화해 나가고 있으나 국토해양부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차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경우, 계속사업인 북부순환도로 개설 사업과 하남산단외곽도로 예산이 100억원씩 삭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인프라 취약한 광주·전남

2012년까지 삭감 지속될

현안사업 줄차질 불가피

진국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예산 400억원 가운데 328억원이 감축 위기에 놓여있다.

전남도는 내년도 SOC 사업에 국고 2조4천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SOC 국고 예산 삭감 방침에 따라 30%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여수~순천 간 국도 4차로 확장 사업 등 31개(계속 21·신규 10) 국도 확장사업 또는 개량사업에 대한 예산 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건설(1조 원), 여수 국가 산단 진입도로(2천억 원), 보성~임성간 철도건설(1천억 원) 등도 예산 반영이 힘들거나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는 이에 따라 여수 엑스포 등 대형 국제행사와 관련된 SOC 사업 예산 확보와 계속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전남 미래에 악영향=2012년까지 계속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맞물려 지역 SOC 사업 예산 삭감이 이뤄진다면 광주·전남지역의 미래는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SOC 인프라가 취약하

■광주시 2010년 SOC 국비협약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총 사업비	요구액	국비부담비율	비고
계	12개 사업	13,177	1,415	973	요구대비 68.8%
신규	송정~나주간 도로확장	703	7	7	7억 확정
	하남~장성간 도로확장	619	6	-	에타 결과후 유보
	용두~담양대전간 도로확장	300	3	3	3억 확정
	하천친환경생태복원	760	45	45	45억 확정
계속	북부순환도로개설	2,080	100	100	삭감예정
	하남산단외곽도로개설	1,580	100	100	삭감예정
	진국산단진입도로개설	1,607	400	72	삭감 328
	일곡~용진간 도로확장	653	100	100	삭감예정
	광주~화순간 도로확장	602	75	75	삭감예정
	국지도49호선 도로개설	2,717	300	192	삭감 108
	행림마을 경계도로원화공사	351	98	98	98억 확정
하천재해예방	1,205	181	181	181억 확정	

(자료:이홍섭 의원실)

다는 점에서 향후 4년 동안 예산 삭감이 지속된다면 접근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의 SOC 예산 삭감은 2010년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2012년 여수 엑스포,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초대형 국제 행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관광객 유치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4대강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낙동강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SOC 예산 삭감은 지역적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이버테러 배후 北·특정세력 추정”

고전적인 해킹 수법인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청와대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DDoS 공격의 배후와 동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DDoS 공격을 놓고선 일부 특정 세력이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정치적 사이버 테러설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북한이나 중복 세력이 사태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진위에 따라서는 파문이 일 전망이다.

DDoS 공격은 해커가 인터넷 카페 등의 파일에 악성코드를 숨겨 놓아 이 파일에 접속한 일반 컴퓨터 수만 대를 감염시켜 일명 ‘좀비PC’로 만들고, 중간 서버(C

시모집 당시 학생 38명이 원서접수 사이트를 마비시켰는데 이들은 경쟁자의 원서 접수를 막으려 해킹 공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등 주요기관에 대한 공격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특정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돼 사회 전체에 불만을 표출한 ‘증오범죄’에 가깝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보통 해커들은 C&C 서버를 통해 좀비PC를 조종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공격 조절 능력을 과시해 돈이나 다른 대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해커 스스로 시스템 마비 현상을 중단시킬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공격 대상에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국가기관과 한나라당, 보수성향의 조선일보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이버 테러일 가능성이 더욱 무게가 실린다.

이번 사건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해커 한 명이 간단히 작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

한미 25개기관 동시 겨냥

정치적 목적 사이버 공격

국정원 북한 배후설 제기

&C : Command&Control)로 이 좀비PC들을 원격 조종해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격이 정치 테러이거나 북한 혹은 중복 세력의 공격일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은 최근 발생한 DDoS 공격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DDoS 공격은 해커들이 돈 벌이 등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올해 2월 검거된 인터넷 보안회사 V사는 작년 9월부터 연초까지 70여 군데의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키고 자사의 보안프로그램을 강제하달 달미를 잡았다.

작년 7월 경찰에 붙잡힌 해커 일당은 그해 3월 미래에셋 홈페이지와 증권사이트를 마비시키고서 “2억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하다 회사 측의 신고로 검거됐다.

학생들의 그릇된 경쟁심리가 이런 사이버 범죄의 동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2006학년도 대입 정

어서 단독 범행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의 다른 관계자는 “이 정도로 주요 정부 사이트를 마비시키려면 보통 악성코드 제조책과 배포책, 해당 사이트 공격책 등 분업 체제로 작업해야 한다. 사회에 불만을 느낀 해커 한 명이 ‘룻감’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발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도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이번 공격의 배후에 북한이나 중복세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 여부를 주목된다.

DDoS 공격 대상이 최근 북한과 불리한 관계가 된 우리나라(11개)와 미국(14개)으로 크게 나뉜다는 점도 이번 공격의 뒤

는 북한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집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설득력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도청별관 여론조사 안된다” 시도민대책위 ‘오월의 문’ 수용 촉구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오월의 문’(별관 1,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를 만드는 안)을 주장하고 있는 광주의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8일 도청 별관에 ‘오월의 문’을 실제 크기의 현수막으로 만들어 내걸었다. /최현배기자 choi@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을 위한 광주전남시도민대책위원회’(이하 시도민 대책위)는 8일 “별관 문제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시도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옛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상황에 대한 시도민대책위 입장’ 문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도민대책위는 별관철거 반대성을 받았던 5·18유족회와 부상자회가 별관 문제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 단체다.

시도민대책위는 “문광부는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별관 철거라는 자신들의 논리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10인대책위가 여론조사를 한다면 문광부의 편을 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10인대책위는 광주 지역 시민사회가 별관 철거논란의 대안으로 제시한 ‘오월의 문’(별관 1,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를 만드는 안)을 수용하도록 문광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오월의 문’을 실제 크기의 현수막으로 만들어 별관에 내걸고 시민을 상대로 홍보에 나섰다.

한편, 광주시장,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10인 대책위’는 활동마감 시한(15일)을 앞두고 11일째 모임을 갖고 별관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교통요지 대로변 최고의

“황금상권”

운영동 “롯데오 빌딩”

확! 달라진 분양·임대조건!!

고객중심의 평형대분양·임대 가능!

사물놀이거리 교통요지 운영동 최고의 실용공간!

1.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 만들기 -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 만들기 -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 만들기

3.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 만들기 -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 만들기 -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 만들기

관망/입/종

- 1.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 만들기
- 2.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 만들기
- 3.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 만들기
- 4.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 만들기
- 5.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 만들기
- 6.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 만들기
- 7.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 만들기
- 8.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 만들기
- 9.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 만들기
- 10.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 만들기

2층부터 5층은 완전한 2층 고객복합

(전선 APT, 중선 APT, 후선 APT 등...)

문의: 571-5600 / 611-7878